

광주시교육청, 전기관 행정전화망 통합

교직원 인권보호 ARS 음성안내 · 녹취서비스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교직원 인권보호와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전화망을 오는 12월까지 통합한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전화망을 시교육청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한다. 전체 기관 내선전화 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 인권 보호를 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시교육청 산하 기관들은 각각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고, 전화망 관리 인력 부재로 보안성이 미흡하다. 또 ARS음성안내 및 녹취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교직원들이 민원인 응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전화망 통합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섰다. '행정전화망 통합 통신사업자 선정 사업' 입찰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KT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화망 통합과 함께 전화망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안성 및 관리성 향상 ▲전화요금 시교육청 일괄 집행 ▲교육청 산하 전기관 상호 간 무료 통화 ▲교직원 선택녹취 및 안심번호 서비스 ▲기관별 ARS 음성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은 달라지는 전화서비스와 관련한 '사용자매뉴얼'을 제작해 교육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

업 추진에 본격 나섰다. '행정전화망 통합 통신사업자 선정 사업' 입찰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KT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화망 통합과 함께 전화망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안성 및 관리성 향상 ▲전화요금 시교육청 일괄 집행 ▲교육청 산하 전기관 상호 간 무료 통화 ▲교직원 선택녹취 및 안심번호 서비스 ▲기관별 ARS 음성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은 달라지는 전화서비스와 관련한 '사용자매뉴얼'을 제작해 교육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

북구, 소상공인 연 7%금리 적금 출시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전국 최초'

북구가 지역 관내 금융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자산 형성 지원 목적의 금융 상품을 전국 최초로 출시한다.

북구는 지역 11개 새마을금고, 광주주화신협과 오는 28일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소상공인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민·관이 함께 개발·출시한 우대금리 적금상품이다.

협약에 따라 북구와 금융기관은 기본금리 4.0%에 우대금리 각 1.5%를 추가 지원, 연 7.0%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 적금상품은 1년 만기에 월 불입금을 10~50만 원으로

설계, 소상공인들이 각자 경제 상황에 맞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 북구는 민생경제 회복 상상자금 1억 5000만 원을 들여 소상공인 3000여 명에게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1인당 1계좌만 가능하다. 다음 달 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2개 협약 금융기관 영업점을 찾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권현만 기자

서구 '옴'진드기 감염 예방 특별 방역

입소 요양시설 전염성 피부질환 발생 및 확산 방지

서구는 최근 광주시에서 집단 옴 의심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옴 진드기 특별 방역을 실시했다.

옴은 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극심한 가려움증, 피부 접합 부위 붉은 발진, 수포 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감염된 사람과 직접적인 피부접촉을 통해 전파되지만 침구, 옷 등을 공동 사용할 경우에도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서구는 고령령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관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옴 진드기 예방 소독법 안내와 관리 지침을 배포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시설 내 옴 환자 집단 발생 시 감염관리 조치와 더불어 지체 없이 보건소로 보고 해 줄 것을 안내했다.



한편, 요양시설에서 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환자가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거나 옴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피부과 진료를 의뢰해야 하며, 옴 환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를 파악해 동시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옴 환자의 옷과 침구류를 50°C이상의 뜨거운 물로 기계세탁 및 10~20분 고온건조 해야 하며, 비닐백에 밀봉 후 7일간 두어야 한다. /조선주 기자

100년만에 돌아온 멸종위기종 '큰바다사자'

신안 가거도 갯바위서 휴식하는 모습 주민 목격

1920년대 일제강점기 남획으로 사라져

일제강점기 남획으로 사라진 멸종위기종 '큰바다사자'가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100여 년만에 돌아왔다.

23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에서 멸종위기Ⅱ급인 '큰바다사자' 1개체가 지난 22일 관찰됐다.

큰바다사자는 영해기점인 녹섬 갯바위에서 휴식하고 있는 모습이 어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주민에 의해 최초 목격됐다.

큰바다사자는 과거 1920년대 신안 가거도 부속섬 구골도, 개린도에서 120여 개체가 서식했으나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남획돼 이후 사라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관찰은 무려 100여 년 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큰바다사자는 시베리아 연안, 캄차카 반도, 배링해 등 북부 태평양 바다에서 서식하는 바다사자의 일종으로 수컷의 무게는 1t이 넘는다.



신안군 가거도에서 발견된 큰바다사자. /신안군 제공

바닷속 110~130m까지 잠수하며, 수중에서는 시속 25~30km로 헤엄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명태, 꽂치 등 어류와 새우, 조개, 소라 등이 주 먹이원이다.

현재 국내에는 큰바다사자의 집단 서식지는 없지만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주변 해역, 제주도 등지에서 아주 드물게 관찰되며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돼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 해역은 '해양생태계보존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어족자원이 풍부한 청정지역"이라며 "큰바다사자의 서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주거편의' 지원 신청하세요"

간단 수리·대청소·방역 방충 등 주민 체감형 복지 실현

#1. 독거노인 A씨(84세)는 고혈압, 당뇨, 신장 이상 등 만성 질환자로 최근 병원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 퇴원했다. 2달 동안 비워둔 집은 오랫동안 치우지 못한 생활 쓰레기와 상한 식재료 등으로 악취까지 심해 혼자서는 청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막막하던 차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주거 편의' 지원을 통한 대청소·방역·수리 서비스 덕분에 편히 집에서 건강을 회복 중이다.

#2. 노인 부부인 B씨(74세)는 치매, 관절염 등 인지·기동 불편 질환자로 배우자의 부양을 통해 생활하던 중 최근 큰아들이 사망하자 배우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감에 빠

져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진 상황이었다. 이웃의 신고를 통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식사 지원'과 '주거 편의' 지원을 통한 대청소·방역·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한시를 놓게 됐다.

광주 동구가 시행 3개월 차에 접어들 '광주다움 통합 돌봄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상자 맞춤형 '주거 편의'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감을 드러내며 주민 체감형 복지서비스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주민 누구나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

다. 서비스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의 경우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 지원,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주민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거 편의 사업은 동구지역자활센터를 사업자로 선정해 ▲간단 수리 ▲대청소 ▲방역·방충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현재 24명의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을 완료했다.

이러한 서비스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례 접수 후 가정 방문을 통해 담당자 확인이 필요하다.

이후 1:1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 후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업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김도기 기자

'풍수해보험으로 재난 대비' 보험료 70~100% 지원

광주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행정안전부·지자체가 보험사와 약정을 맺어 가입 보험료의 70~100%를 조건부 지원해 자부담금은 연 1만~4만원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이 최대 92% 수준이었으나, 2022년 4월부터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에게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재난이다.

광주시는 풍수해보험의 경우 연중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원리상 계약 당시 진행 중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고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만 유효한 만큼 재난이 닦치기 전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 풍수해보험은 재난발생 때 일반적으로 재난지원금에 비해 보상금액이 커 보험 가입자에게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시, 장마대비 총력대응 체계 구축

장마예보 따른 '풍수해 대책점검 전담회의' 대책 논의

광주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기상청은 25일부터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정체전선이 북상해 광주지역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리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3일 오전 중앙정부 '풍수해 대책점검 전담회의(TF)' 7차 회의에 이어 시·자치구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열어 기상상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장마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빗물받이·맨홀 등 하수시설물 ▲산사태 우려지역 ▲대형공사현장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등에 대한 여름철

풍수해 대응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 자치구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통해 수방 장비와 자재가 제때 현장에 투입되도록 조치했다.

특히 지난 5월 9일 자치구와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전원 둔지에서 재난대응 역량훈련을 진행했다. 이들은 엔진펌프를 가동한 배수작업과 순간흡수성 마대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극한 기상상황을 가정한 집중호우 대응, 태풍 내습 훈련을 받았다.

또, 중앙정부 재난대응정책에 발맞춰 행정안전부에서 6월 초부터 매주 2회 이상 개최하고 있는 '풍수해 대책점검 전담회의(TF)'에도 적극 참여



문영훈 광주시행정부시장이 23일 오후 서구 쌍촌동 상습침수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하고, 지난 13일에는 행정부시장 주재 자체대책회의를 개최해 논의된 대책 등을 이행하며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도기 기자

광주교육청,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공사 심사 기준 개선

광주교육청이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석면 해체·제거 공사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공사수행 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안전성 평가 ▲결격사유 총 4가지 항목을 심사한다. 이를 통해 이행 능력이 있는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정성 평가 항목이 아직 안정성 등급을 받지 못한 신생 업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협의를 거쳐 최종 고시안을 마련했다. 오는 7월1일 입찰공고부터 이 고시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두 가지이다. 먼저 안정성 평가 등급 배점 적용을 변경해 신설 업체가 받는 불이익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계약업무 혼선을 줄이고자 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 평가 시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 신설 업체' 또는 '안전성 평가대상에 평가 중인 업체'는 감점이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평가' 신설 업체의 참여기회를 좀더 열어주고자 한다.

현재 안전성 평가 등급은 S-D까지 총 5개 등급과 '미평가' 총 6등급으로 이뤄져 있다. 적격심사 시 미평가 업체의 경우 감점이 있었으나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는 이런 불이익 없어진다.

전남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체전 온힘

전남도는 10월과 11월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참가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장 불법 촬영기기 점검에 나섰다

6월부터 체전 기간까지 운영하는 이번 점검은 전남도와 22개 시·군 체전 담당부서, 환경부서,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22개 시군에 분산된 전국체전 70개 경기장과 장애인체전 38개 경기장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탐지장비를 활용해 정밀 탐색하고 육안으로 화장실 칸

내벽이나 천장 등 의심되는 물체와



흔적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의 경각심을 일리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다.

/김 호 기자

슈퍼 엘니뇨 온다...전남도 '여름철 농업재해 예방' 총력

취약시설 7338곳 점검 · 농업재해 보험료 1422억 지원

전남도가 올 여름 슈퍼엘니뇨 발생 전망에 따라 농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상 슈퍼 엘니뇨로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폭우 등을 동반한 기상이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많을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전남도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시·군, 농협,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기상상황 전파, 재해유형별·품목별

대응요령 안내,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추진 등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수리시설 4466곳, 과수·원에 시설 630곳, 축산시설 2242호 등 재해 취약시설 7338곳을 사전 점검하고, 농작물 생육상황 등 분야별 상습 피해지역을 사전 정비해 피해에 대비키로 했다.

매년 이상기후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1170억원, 농업인 안전보험 150억원, 농기계 종합보험 102억원 등 '3대 농업정책보험' 가입에도 1422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시·군, 농협과 함께 내달 14일까지 한 달간을 보험 가입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가입토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여름철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무엇보다 농업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 정책보험이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호우·태풍·가뭄 등으로 농작물 3만303ha, 농업시설물 29ha, 가축 7만5000마리 폐사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복구비로 386억원을 지원했다.

/김 호 기자